



제282회 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 2018 주요업무 보고

2018. 7. 18.(수)

정무부시장실

# 1. 일반 현황

## 1 인력현황

○ 정무부시장실 : 정원 14명 / 현원 14명

( '18. 7.10. 현재)

구 분	총 계	일반직		별정직		
		6급	7급 이하	5급 이상	6급	7급
정 원	14	2	2	7	2	1
현 원	14	2	2	7	2	1

## 2 예산현황

○ 업무추진비 : 197,800천원

(단위 : 천원, '18. 6.30. 기준)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비 고
계	197,800	95,196 (48.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3,600	93,253 (48.2%)	시정 협력·홍보 간담회비, 직원 격려· 경조사비, 사회복지 후원금 등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1,943 (46.3%)	부서운영에 필요한 음료, 차, 소모품 등 구입

## 3 주요기능

- 대 의회·국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시정성과 제고
- 정당과의 소통을 통한 원활한 시정운영 도모
- 주요 시책의 대내·외 조정 및 언론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 증진

## Ⅱ . 주요업무 추진계획

### 1 **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민생 관련 협치 강화**

주요 시책과 민생 현안사업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중심의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시민 삶의 질 제고 및 시정성과 달성

#### 추진방향

-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 시행관련 시의회와 협조체계 구축
  - 의장단·당정협의회 및 상임위원회별 현안정책 설명과 의견수렴 강화
  - 시정 주요사업 검토·대시민 발표 시 시의회와 적극적인 사전 협의 및 소통
- 시정운영 파트너로서 의회와 상시적인 소통을 실시하고 의견 수렴
  - 지역별 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해 상시 논의하고 집행부와 의회 간 협력 모색
  - 주요 행사 개최시 초청대상, 범위 등과 관련 의회와 사전 조율하여 추진

#### 상반기 추진실적

- 의회 개최 전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통한 현안 사전보고 및 협의
  - 제278회 임시회 관련('18.2.21.)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 제280회 임시회 관련('18.4.4.) : 장기미집행공원 실효대응 보상계획 등
  - 제281회 임시회 관련('18.6.18.) : 2017회계연도 결산안 등
  - ※ 제282회 임시회 관련('18.7.18.) :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상건례 등
- 교섭단체별 협의회 개최
  - 제278회 임시회 관련 당정협의회('18.2.19.) :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남·북 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 현안보고 및 협의
  - ※ 그 외에도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시의원과 개별면담으로 수시로 논의

## □ 하반기 추진계획

### ○ 정기적 간담회 및 당정·정책협의회 추진

- 지도부·상임위원장단 등과 현안 논의 및 협조사항 공유 위한 간담회 개최
- 정당별 원내대표단 또는 당직자와 집행부간 정책 현안 논의의 장 마련

### ○ 위원회별, 지역별 현안공유를 위한 의원 간담회 개최

- 상임위원별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정무부시장 주재 간담회 개최
- 지역별, 의원별 간담회를 통해 자치구별 주요 민원사항 공유

### ○ 시의회와 주요정책 및 행사 사전 공유

- 기자설명회, 브리핑 등 보도자료 배포 전 실·본부·국장 책임 하에 사전설명
- 주요 행사 등 개최시 최소 7일전 지역 의원에게 경위 및 사업내용 설명·초청

국회 및 중앙부처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기반 등  
우리시 핵심과제에 대한 입법 추진

### □ 추진방향

- 시 핵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보 및 기준보조율 차별 시정 추진
- 국정감사 등 시기별 對국회 대응으로 우리시 현안에 대한 국회협력 강화

### □ 상반기 추진실적

- 대국회 간담회 및 국회의원 면담 개최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간담회(1.15) :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확정 건 등
  - 국회의원 지역구 현안 논의를 위한 시장면담(5회) 등 국회협력 추진
- 법률·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방문 및 협조 실시
  - 도시철도법 개정(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보전)을 위한 법사위 소속 의원실 방문(8회)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환노위 및 미세먼지특위 등 법률·제도 모니터링 지속 추진
- 기획재정부(재정정책자문회의) 기준보조율 차별관련 건의 : '18. 3월
- 중앙부처 및 기재부 방문, 국비 지원의 타당성·시급성 설명 : '18. 4~5월
  - 국토교통부 예산협의회의(4.30),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협의회의(5. 9)
- 기재부에 제출한 소관 중앙부처 국비 반영내역 모니터링 : '18. 5월
- 행안부에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불합리성 개선 건의 : '18. 6월

### □ 하반기 추진계획

#### ① 법률·제도개선 과제 입법 추진

- 서울형 지방분권 과제 실행을 위한 국회 및 중앙부처 협력 지속 건의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자주재정권 확충,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확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주요과제 이행 촉구

- 의제설정 단계부터 실행까지 우리시 의견 관철을 위한 협력체 구성 촉구
  - 市-중앙정부·유관기관·전문가 등과 정례적 정책협의 네트워크 신설 촉구
    - ▶ 분권의제 선정부터 세부 실행전략 수립까지 공감대 형성 가능한 통로 마련
- 입시국회 일정에 맞춰 제도개선 과제 건의·전달
  - 정책위원회 의장 및 소관 상임위(법사, 정무, 안행, 산통, 환노위) 간사 의원에게 제도개선 과제 건의·전달 및 입법 필요성 설명
- 입시국회 이후에도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 선정 지속 건의
  - 본부·국별 개선과제 발굴, 소관 상임위 위원에 방문설명 및 관련 자료 제공

## ② 국고보조금 적극 확보 추진

- 주요 사업에 대해 실·본부·국 협력토록 하여 국비추가확보 역량 집중
  - '18년도 국비 추가 확보 신규 사업은 지속 반영되도록 관련부처 등과 협력강화
  - 국비확보 T/F 운영 및 사업별 전담 국회의원 매칭(서울지역 및 소관 상임위 등)
- 시 핵심사업을 조기 선정하여 관계부처·기재부·국회 대상 설명 실시
  - 정부예산 편성 단계에 따른 국비 반영 내역 모니터링 추진(8월말)
  - 상임위/예결위 예산(안) 심사시 시장단 및 소관 실·본부·국장 등 국회의원·보좌관 대상 방문 설명

### ※ 정부 예산편성 일정

: 정부예산(안) 편성(9.2일, 기재부 ▶ 국회), 정부예산 심의·확정(12.2일, 국회)

## ③ 시기별 국회 대응 철저 및 소통강화

- 국정감사 대비 국회연락반 TF 운영
  - 주요 상임위(행안위·국토위 등) 의원 요청사항 관리 및 의원별 관심사항 파악
  - 사전 쟁점사항에 대한 자료요구 배경파악 및 분석 실시, 요청자료 제공 등
- 국회 협력 관계 상시 유지 및 의원 요구사항 처리 철저
  - 지역 국회의원·주요 상임위 보좌진 대상 정책간담회 수시 개최로 시 현안 공유
  - 주민 민원 및 국회의원 정책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적 검토 및 회신 철저

각계 각층의 시정 건의사항과 주요 정책에 관련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주요 시책을 홍보하여 민관이 함께 만드는 시정 구현

### □ 추진방향

- 언론사 및 출입기자단과 수시 소통으로 주요 정책 및 시정현안 설명
- 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각종 주민단체, 기관 등 면담 적극 추진
- 전문가 그룹의 의견수렴을 위해 학계, 연구계 주요인사와 교류 추진

### □ 추진내용

- 시정 정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언론기관 및 출입기자 간담회 실시
  - 미세먼지, 보행도시 등 시책 관련 언론사별 논설위원, 편집국장 등 간담회 : 3회
  - 신년간담회, 춘계 산행 등 언론사별 출입기자 간담회 : 16회
  - ※ 기타 수시 기자간담회를 통한 시정설명 및 홍보강화
- 도시재생, 교통, 장애인 정책 등 관련 이해당사자별 간담회 지속 실시
  - 실버케어센터 건립 관련 주민단체, 담당부서간 간담회 및 의견 조율
  - 장애인, 개인택시조합, 사회적기업, 가락시장조합 등 시책 관련 의견 수렴
- 주요 시책관련 내·외부 행사 참여로 시민과의 소통 강화
  - 세계 여성의 날, 저출산 종합대책,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등 시 주최 행사
  - 기후변화 대응,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지방분권 개헌 등 시정 토론회 참여
  - 제2 남도학숙 개관, 언론사 주최 마라톤 등 유관기관 주최 행사
- 정계, 학계, 단체 등 주요 유관기관 및 전문가 대상 시정설명 및 의견수렴
  - 남북 교류 협력 현안 관련 국회/정부, 유관단체와 업무협의 및 관련 전문가 자문 간담회 실시

## 우천시 중장기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

연번	분야	과제명	관련법률
1	민안 생정	경제민주화 기본법 제정	경제민주화 기본법
2		청년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제정	청년기본법
3		'변종 SSM'에 대한 규제 근거 신설	유통산업발전법
4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속성 확보 및 사업조정 근거 신설, 성과공유제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5	경제 활성화	수도권 공장총량제 및 공업지역 추가지정 제한 개선	수도권정비계획법
6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허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규제프리존 대상지역 확대(수도권 포함)	규제프리존 특별법
8	도재 시생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방식 동의기준 개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9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제공범위 확대	국토계획법
10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가능한 기반시설 확대	국토계획법 시행령
1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 매수청구 시 투자심사 대상 제외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12		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방법의 합리적 개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3	주안 거정	공동주택 공동관리 제한 규정 개정	주택법 시행규칙
14		정비구역에서 공공주택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5		임대주택 건립이 포함된 소규모 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6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시기 지정	주택법 시행령
17	지재 방정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차등 보조를 차별 개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지방재정법
19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노인복지법, 도시철도법
20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징수 강화	지방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지방분권 7대 핵심과제

### ① **자치조직권 확대**

자치행정권

-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의 자율적 조직권 확대로 책임행정 구현)
  - 3급 이상 기구 설치 등 조직 관련 사항을 조례로 운영하도록 권한 부여
  - 책임부시장제 도입, 실·본부·국 기구 수 및 복수직급제 확대 등 우선 추진

### ②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입법권

-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자치법상 자치법규 제정권 범위 확대)
  -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가 가능하도록 포괄적 자치권 명문화

### ③ **시민참여형 지방분권개헌**

자치입법권

- 시민참여형 지방분권 개헌 (개헌으로 시민참여형 분권국가 구현)
  -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시민참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
  -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자치권 확대

### ④ **중앙의 통제권한 조정**

자치행정권

- 중앙의 통제권한 조정 (중앙의 불합리한 통제권한 폐지)
  - 청년수당 직권취소 등 지방의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의 일방적 시정명령·직권취소 권한 및 복리사무에 대한 의무협의제도 폐지

### ⑤ **국가권한의 지방이양**

자치행정권

- 국가권한의 지방이양 (사무배분 체계의 양적·질적 확대 개선)
  - 지역 특성을 반영하거나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촉구
  - '12년 이양확정 후, 미이양 사무의 일괄이양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 ⑥ **자치재정권 확대**

자치재정권

- 자치재정권 확대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 및 재원 확보)
  - 지방소비세 인상 및 지방세적 성격이 강한 국세의 단계별 지방이양
  - 기초복지사업 등의 국가보조사업 확대 및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차등적용 개선

### ⑦ **시행령·규칙 개정**

자치행정권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행정적으로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 우선 추진)
  - 행정기구 설치권한 확대, 국비지원 강화, 용도지역 제도 운영의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등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과제 개선